

이정식 “중대법 완화 등 노동계 우려 인식… 현안 함께 풀 것”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한국노총 방문… 지도부 의견 경청 근로시간 등 尹 정부 정책 도마 위 “노동계 의견, 국정 반영되도록 노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취임 전부터 ‘노사 상생’을 강조해왔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친정’ 격인 한국노총을 찾았다. 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정부 정책 관련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 시작부터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됐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 장관을 만나 노동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격변의 한국노동 운동을 온 몸으로 헤쳐오신 장관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발표된 이후 향후 노동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히, 노동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 근로 8시간,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해 민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도 취임식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부분도 목과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규정에 담긴 안전·보건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국정과제

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저도 한국노총에 있을 때 정부가 늘 노동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자주 뵙고 고용,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윤 대통령도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주면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986년 한국노총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노동계와 첫 인연을 맺었다.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대외협력본부장, 정책본부장, 사무처장 등 26년간 노사 관계 개선에 힘쓴 노동 운동가 출신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잠정 연기됐다. 이어 이 장관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회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尹 ‘강군’ 키운다면서… 예산안은 ‘표리부동’

〈表裏不同〉

추경 편성서 국방예산 1조 이상 삭감 “전력지원물자 개선 꿈도 꿀 수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군의 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병봉급 200만원 지급과 국군장병들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 및 ‘주거여건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부는 33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을 1조원 이상을 삭감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앞으로는 강한국방을 외치면서 뒤로에서 국방예산의 삭감을 추진한다’, ‘최저가입찰로 조악한 가짜가 판치는 전력지원물자 분야’, ‘국방부와 관사도 빼졌는데 팽이나’ 등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병장봉급 내년 100만원에 그쳐…군 간부 처우도

16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에 따르면 현재 67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병봉급과 함께 자산형성을 위해 수령 받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해도 2025년이 되어야 병장기준으로 봉급 200만원이 충족된다. 정부지원금은 현재 14만 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때문에 ‘군인휴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력운영비 9518억원과 방위력개선편비 5550억원 등 총 1조506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 중 9500억원 이상은 장병복지 및 전력운영관련 예산에서 빼은 것으로, 이는 감액 국방예산의 63% 이상이다. 병의 생활관 신축·개보수 등 주거개선 예산은 550억9000만원이 감액됐다. 기존예산 대비 30%가 삭감된 것이다. 군 관사와 간부 숙소 추가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23%가 줄어들어 135억원이 감액됐다. 장병들의 편의시설 설치·보수 관련 예산도 218억5000만원 삭감됐다.

◆전력지원물자, 무기체계도 예산 깎여

‘짜퉁’ 판칠 것

익명의 지휘관은 “민감하게 드러나는 병급여와 주거 및 복지에 예산도 대폭 삭감되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전력지원물자 예산 증액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라며 “장병 개인의 생명과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방탄헬멧, 방탄복 및 각종 피복, 총기 및 광학장비, 통신장비 등의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의 과제에 포함됐던 전력지원 분야 개선은 발표 당시에도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어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지원체계보다 무기체계 예산에 치중하는 국군이 대폭 줄어든 예산을 전력지원물자 분야에서 뺄 수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일선 장병들은 ‘최저가 입찰제’로 중국제 가짜가 앞으로 더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병의 의·식·주와 복지관련 예산만 삭감된 것이 아니기에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F-35A 전투기와 C-130H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성능개량사업, 해상초계기-2 사업 예산도 크게 줄었다. F-35A와 C-130H의 성능개량 예산은 각각 50억원과 100억원이 삭감됐다. P-8A을 도입하는 해상초계기-2 사업도 100억원이 감액됐다. /문형철 기자 captinm@

농식품부-대한항공 전용 항공기로 딸기 수출 이끌어

5개월간 딸기 1584t 실어 날라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딸기 전용 항공기가 고품질 딸기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협력해 추진한 딸기 전용 항공

기는 지난 5개월(2021년12월~2022년4월) 동안 총 385편(홍콩 227편, 싱가포르 158편) 운항하며 동기간 홍콩·싱가포르 수출물량의 93%에 달하는 1584톤을 실어 날랐다.

딸기는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생산해 수출하는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해소를 위한 딸

기 전용기는 작년 싱가포르행에 이어 올해 홍콩까지 확대 운영됐다.

수출 농가와 업체는 딸기 전용 항공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기에 수출을 지원해 딸기의 신선도를 높여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운임이 지속되는 여건에서 시중운임 보다 낮은 고정운임을 제공해 수출업체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자동차 수출 반등… 내수·생산은 감소세

친환경차 호재… 4월 수출액 44억 4000만 달러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이어지며 자동차 생산과 내수는 감소가 이어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각각 19만6780대 4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12.4%, 6.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수출 대수는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글로벌 시장 내 국내 브랜드의 친환경차 판매호조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3월(20만6677대)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 금액은 수출물량 증가와 친환경차 수출 비중 확대(19.5 → 24.4%) 등에 힘입어 올해 3월 실적과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주요시장인 유럽연합(EU)지역으로의 수출은 줄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부품 공급차질과 조업일수 감소(-1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30만6462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출고 적체 지속과 역기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한 14만3167대 판매에 그쳤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친환경차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현지 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한 19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선비콜’ 택시영업 제한행위 제재

특정 충전소 이용하지 않을시 콜 금지

특정 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콜 배차를 막은 개인택시사업자 단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형가스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배차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해 시행한 선비콜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비콜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원활한 택시 영업을 위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이에 대한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위해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다.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선비콜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형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선비콜이 이런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대형가스충전소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개정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선비콜의 이런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